

독일의 대연립정권에 의한 에너지 정책의 개요

2005년 9월의 총선거를 거쳐 11월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여성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립정권(大聯立政權)이 탄생하였다. 총선거 전에는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교민주사회동맹(CDU/CSU)이 자유민주당(FDP)과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회민주당(SPD)의 선거 전 후반의 맹렬한 추격으로 CDU/CSU의 득표수가 늘어나지 못하여, 결국 CDU/CSU는 SPD와 같이 대연립정권을 꾸미게 되었다. 이 양 당은 선거 전에 에너지정책 분야에서는 서로 용납치 않는 정책강력을 발표하여 왔었다.

특히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는 양 당의 의견에 격차가 심하여 총선거 후에 실시되었던 정책 협의과정에서 최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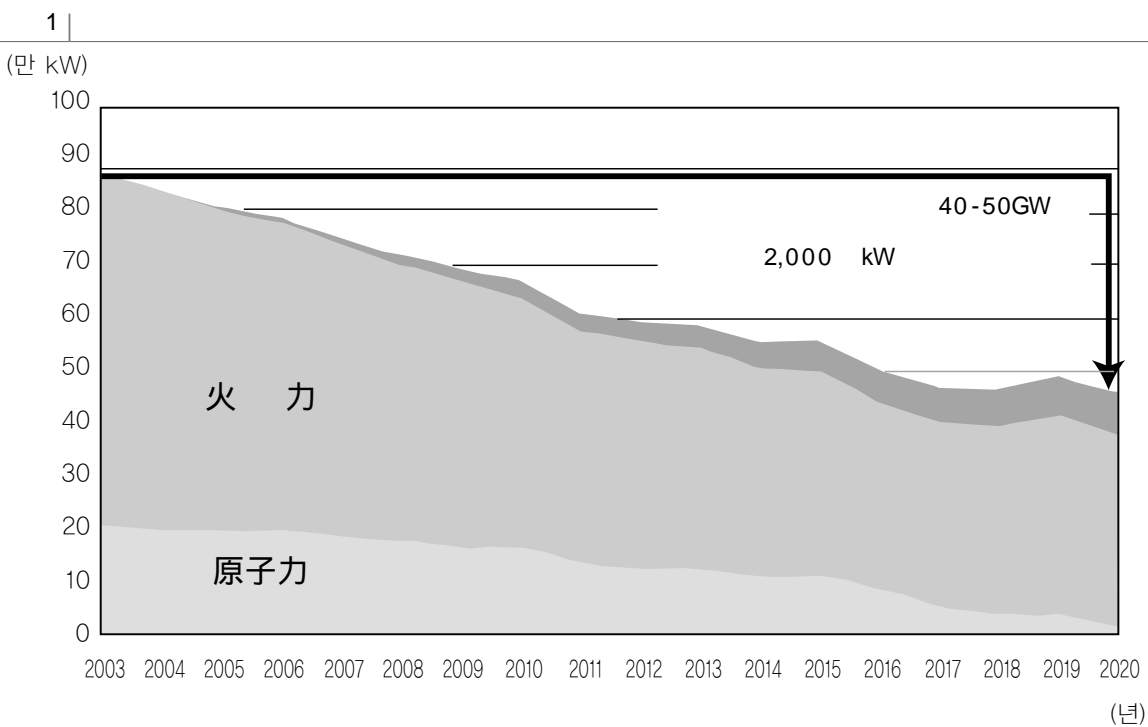
2005년 11월 11일에 발표된 대연립정권의 정책강령에 담겨진 에너지 정책의 개요를 소개함과 동시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과제에 관하여 기술한다.

1. 대연립정권의 에너지 정책의 개요

독일의 기독교민주사회동맹(CDU/CSU)과 사회민주당(SPD)은 2005년 11월 11일, 약 1개월 간 실시된 대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협의를 끝내고 「독일을 위하여 서로 함께……, 용기와 인간성을 가지고……」란 표제의 정책강력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에너지 정책은 대부분이 전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이 추진하여 온 탈(脫) 원자력 정책은 다시 검토되지 못하고, 원자력은 2021년 전후까지 점차적으로 정지시켜 나가는 정책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슈뢰더 정권이 에너지 정책에서 눈총을 받아오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있어서는 총발전 전력량에서



(주) 위 그림에서는 1998년 이전에 건설된 화력발전 설비와 원자력발전 설비의 폐지용량이 추계(抽計)되어 있음.

차지하는 비율을 2010년까지 12.5%로, 2020년까지는 적어도 2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리파워링과 옵션 풍력의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그 때문에 송배전선의 강화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입 축집의 방법으로는 현행의 「재생가능에너지법」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고정가격에 의한 매입제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다만, 2007년에 이 제도를 검증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가격의 수준을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정책강령에 담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재생가능에너지의 촉진을 위한 활동 강화를 위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국제기관(IRENA)」의 설립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도 명기되었다.

1999년 4월에 도입된 환경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지만, 세율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EU 제국 간에 세계의 조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언급에 그쳤다. 이것은 새 정권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현행 16%에서 19%로 인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것에 더해지는 환경세의 세율 인상은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타 석탄산업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2008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앞으로의 과제

탈원자력 정책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독일에서는 노후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폐지로 인하여 야기될 공급력 문제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전후가 되면 현재 총발전전력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2,000만 kW의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된다. 또한 2004년에 독일전기사업연합회(VDEW)의 위탁으로 실시된 브레멘 대학의 연구에서는 노후 화력발전설비의 운전기간을 40~50년으로 가정하여 2020년까지 2,000~3,000만 kW정도의 화력발전설비가 폐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의 추정으로 2020년 전후에 기존의 화력·원자력발전설비의 약 50%가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풍력발전의 이용 및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독일계통운동자협회(VDN)의 수급 예상에서도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설비용량이 2015년까지 약 3,600만 kW(2004년 현재, 1,663만kW)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짜여있다. 그러나 VDN의 수급추정으로 하는, 풍력발전설비는 그 용량의 5~10%밖에 확실한 공급력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어, 확실한 공급력으로 예상한 공급가능 설비용량은 최대전력이 2015년 시점에서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브레멘 대학의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신규 설비투자의 증가로 전기요금이 상승함과 동시에 전력사업 분야의 CO₂ 배출량 삭감이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